

국정운영 로드맵, 전남 지속가능 성장 ‘출발점’ 삼아야

AI·재생에너지·농생명 중심 신성장 전략

도, 균형발전 선도지역 도약 과제 제시

새정부가 확정한 국정운영 로드맵을 계기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

전남연구원은 3일 발표한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전남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전남이 미래산업 중심의 자립형 지역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전남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를 연계한 이차전지·수소 산업 육성, 고층 우주발사체 산업을 활용한 항공·모빌리티 산업 고도

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을 혁신산업과 연계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새정부의 ‘5국3축’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전남은 초광역 경제권 구축과 함께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하는 다핵형 발전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년층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전남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농생명 기반 산업을 청년 창업·고용과 연계해 ‘일자리-산업-정주’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 브랜드로 육성해,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저감 산업 육성과 함께,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갯벌 복원 등 생태복원 사업, AI 기반 재난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적응형 안전도시’ 구현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경지면적과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전남이 식량안보와 농촌 지속가능성의 책임을 동시에 지닌 만큼, 농업의 산업화와 농촌사회의 자립이 결합된 ‘전남형 농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생명·식량·환경이 결합된 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은 “새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은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이 자원과 인재, 산업을 바탕으로 자생적 성장을 이루는 국가 대전환”이라며 “전남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혁신 성장을 선도할 실험무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전남정책연구는 지역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분기별 연구간행물로, 연구원 홈페이지(<https://jini.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병도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與에 사법개혁안서 제외 요청”

민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

이니 입법에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대통령실

이 입법에 제동을 걸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나아가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에 이제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라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단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표 간사, 김승원·최기성·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3년 새 1.6배 급증”

전진숙, 대기 평균 32.8일…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조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이 3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8만 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는 2023년 12만2729가구, 지난해 13만9508가구로 3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지난 2023년 6만6515가구에서 지난해 7만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 이용은 지난 2023년 1만7695가구에서 지난해 4만695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3년 주기, 응답자 3703명)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 시간(07~09시, 60.4%)과 퇴근 시간(17~19시, 99.6%)에 집중돼 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전일제보다



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보육기관과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보완 서비스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은 32.8일(2024년 기준)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즉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전국 아이돌봄센터는 232개소(직영 18개소 포함)이며,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2만9635명으로,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유연근로, 재택·플랫폼 노동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부모의 돌봄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근무 형태와 가족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는 전남이다”

이재태 도의원, 정부에 촉구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남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각국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융합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무한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국가 과제로 이를 뒷받침할 연구시설 구축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AI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갖춘 전남은 인공태양 연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넓은 부지와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데 전남은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고 풍부한 가용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전, 전력 관련 기업 670여개가 집적된 연구·산업 생태계 역시 전남만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략과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도 전남 실현과 글로벌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광주 도시철도’서 계속

광주시는 현재 전력선 안정화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어 내달 22일까지 예정된 도로 복구 완료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광주 북구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12월22일까지 도로개방이 안되면 시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초 올해 개방 대상이 아니었던 20개

정류장 주변 도로도 작업 속도가 빨라져 4곳을 제외하고는 연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내 도로 복구가 어려운 정류장 4곳은 23구 204(금호지구입구), 205(금호시영1단지), 3공구 210(해대2차아파트), 6공구 219(중흥삼거리) 정거장 등이다.

광주시는 현재 1단계 구간 공정을 제조 중이며, 개통 시점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2027년 말에 1단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